

유럽의 실업과 워크셰어링(worksharing)

姜 又 蘭*

워크셰어링이란 간단히 말해서, 수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일자리를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분배하겠다는 취지하에서 행해지는 여러 가지 고용·작업 방식을 지칭한다. 그러한 방식의 예로는 작업 시간 단축, 임금 인하, 교대 근무, 조기 정년 퇴직, 파트타임 취업 등이 있다. 물론 이러한 방식들이 요구 또는 고려되는 직접적인 원인은 높은 실업률이다. 즉, 실업자를 줄이고 일시 해고를 가능한 한 막아보자는 것이 워크셰어링의 목적인 것이다.

이 워크셰어링은 지난 해 하반기 이래 동부를 제외한 유럽 거의 전역에 걸쳐 노사 관계의 최대 이슈로 되어왔다. 이 글에서는, 앞으로 유럽 노사 관계의 발전 방향에 상당히 의미있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지는 워크셰어링의 배경과 구체적인 實例를 알아보고, 그 효과를 예측해 보겠다.

유럽의 실업

유럽의 실업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지만 요즘 같이 심각한 정도의 실업률은 흔하지 않았다. 현재 EU 12 개국의 실업률은 11%

를 육박하고 있는데 올 하반기에는 12%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스칸디나비아를 합친 유럽경제지역(EEA)의 총실업 인구는 2,3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83년을 기점으로 미국을 상회하기 시작한 유럽의 실업률이 이제 미국의 두 배에 가까워지게 되며, 유럽은 실업에 있어서 대공황 이래 최악의 사태에 직면하게 된다. 이렇게 고조된 위기감으로 인해, EC 집행위는 벌써 수차례에 걸쳐 고용 관련 정상 회담과 장관 회의를 개최하였고,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고용 창출 방안 논의만을 위한 G7의 '일자리 정상 회담'을 3월 중순 워싱턴에서 개최하자고 제안해 놓고 있다.

EU 주요국들의 실업 상태를 보면, 우선 독일의 경우 2월 중순 현재 400만 명 이상이 실직 상태에 있다. 서부 독일의 실업률은 작년 12월에 8.1%에서 2월에는 8.8%로, 동부는 동기에 15.4%에서 17%로 각각 증가하였으며, 실업 인구는 1월 현재 서독이 270만 명, 동독이 130만 명이다. 게다가 이 수치에는 150만 명에서 200만 명 가량의 공공 영로 취업자가 제외되어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이 범주에 드는 취업자와 그밖의 불완전 취업자를 포함시키면 동독의 비공식 실업률은 35% 이상일

* 객원연구원, 영국 London School of Economics 경제학 박사, 조직행동·노사관계 전공.

것으로 추정된다. 독일 실업의 심각성은, 91년 이후 지금까지 서독의 금속·엔지니어링 부문에서만 60만 명이 직장을 잃었다는 사실에서 단적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10월 총선에서 콜수상이 패배한다면 그것은 실업 문제 때문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독일의 실업률이 높아만 가는 추세에 있는데 반해 영국의 실업 인구는 작년 한 해 동안 22만 명이 감소했다. 이러한 사실은 경제 회복을 시사하는 청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실상은 이런 외형상의 수치와는 상당히 다르다. 우선 영국의 실업 인구 감소는 전적으로 파트타임 고용의 급격한 증가 덕분이며 全任職은 그 절대수에 있어 감소 일변도이다. 이러한 경향은, 家長(남녀 불문)이 전임직인 가구가 81~82년에 49%였던 것이 94년 현재 40.5%로 줄어든 것을 봐도 확인된다. 고용에 있어서 또 하나의 변화는 제조업에서 서비스 부문으로의 이전이다. 예를 들어 1993년 상반기 영국의 북서 지역에서는 제조업 고용 인구의 4%가 감소했는데, 이러한 고용 패턴의 변화는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장기 또는 영구 실업의 결과, 오늘날 영국에서는 노동자 계급 밑에 또 하나의 새로운 계급인 'underclass'가 정착되고 있다.

프랑스의 실업은 수년간의 적자 재정에서 기인한 막대한 부채와 맞물려 유럽에서도 특히 심각한 지경이다. 현재 실업 인구는 328만 명이며 연말에는 실업률이 13%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된다. 실업이 고세율을 초래하고 고세율에 의해 다시 실업이 더욱 증가하는 악순

환에서 탈피하겠다고 선언한 발라뒤르 총리는, 작년 7월 소위 발라뒤르 국채를 발행하여 조달한 186억 달러로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사용자에 대한 세금 인센티브를 증대함으로써 실업과 싸우고 있다. 또한 작년 10월에 시작한 국영 기업의 사유화 작업으로 지금까지 73억 달러의 재원을 마련했으며 올해 내로 엘프석유를 59억 달러에 매각하려 한다. 그러나, 프랑스의 직업 훈련 프로그램이 독일이나 영국의 그것과는 달리 실질적 효과를 거두지, 또 발라뒤르의 高프랑貨 정책이 초래한 고금리가 과연 경제 회복과 병행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이태리의 실업률은 11.7%로, 가까운 미래에 호전될 기미는 안보인다. 이는 작년 한 해 동안에 공업 생산과 GDP에서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을 정도로 경제가 열악한 상태였고, 이에 따라 FIAT, Olivetti, Alitalia, RAI, ILVA 등을 포함하는 거의 대부분의 주요 기업들이 감원을 단행했거나 올해에 계획중으로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제적 악조건 속에서 치뤄질 3월 27~28일의 총선에서 우파연합(新파시스트를 포함한)이 의회의 다수를 확보할 수도 있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다.

스페인의 상태는 EU 최악이다. 수년간의 경제 성장 뒤에 불황 국면으로 접어든데다가, 실업률은 통제 불능의 23.1%이다. 이러한 난국을 타개할 일환으로 곤잘레스 수상은 노동시장의 개혁을 주도하고 있는데, 개혁의 골자는 기존의 각종 노동 규칙을 완화해 고용과 해고를 용이하게 할 뿐 아니라 사용자의 부담을 줄이고, 실업 보험에 대해 과세하며, 최저

임금 이하의 도제 제도를 시행한다는 것이다. 이 개혁안은 의회와 언론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지만 노동 조합은 심하게 반발하여, 지난 1월 말 스페인의 양대 노조가 1일 파업을 단행했다.

워크셰어링

위와 같은 고실업의 상황에서 EU 집행위, 각국 정부, 개별 기업이 이미 도입했거나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개념이 워크셰어링이다. 이 글에서는 프랑스 정부 시책으로의 워크셰어링과 독일 자동차회사 폭스바겐의 예를 살펴보겠다.

프랑스 노동부는 92년 하반기에 워크셰어링 계획을 마련했다. 그 목표는 기업들의 총고용에서 파트타임의 비율을 높이고 '점차적 조기 정년', 즉, 완전히 정년 퇴직하기 몇년 전부터 파트타임 업무로 이동하는 방식을 도입한다는

것이다. 노동부가 분석한 파트타임제 도입의 장애물은, ① 비숙련 노동이 주를 이룬다는 점, ② 파트타임 사원에게 직업 훈련을 시키고 직급 체계내로 통합하기 곤란하다는 점, ③ 작업 순환을 조직하기가 복잡하다는 점, ④ 고정 비용이 높다는 점 등이다. 반면 파트타임제의 장점으로는, 젊은 무경력자의 취업을 용이하게 하고, 정년 퇴직에 보다 순탄하게 적응하도록 한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노동부의 자체 분석 결과, 피고용인의 생활의 질 향상이라는 피고용인의 요구와 효율이라는 사용자의 요구를 둘 다 만족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이 결론에 의거하여 <표 1>과 같은 몇가지 주요 요소들을 뽑아 워크셰어링 계획안을 구성했다.

아래의 정부안이 의회에서 통과된 후 94년 1월 현재 30여 개의 기업이 워크셰어링을 채택하여, 고용을 보장해 주는 대신 근로 시간

<표 1> 프랑스 정부의 워크셰어링 案

사용자 부담 감축	피고용인의 사회 보장 비용에서 사용자 부담액을 30% 낮춤.
	순임직 채용시 파트타임 사원에게 우선권 부여.
	임금과 승진에 있어 전임직과 동일한 조건.
초과 근무	정상 근무 시간의 10% 초과 근무 허용. 단, 단체 협약에 준거할 경우에 한해 1/3까지 초과 근무 허용.
점진적 조기 정년	연령이 55세를 초과한 피고용인은 현재 총액 임금의 80%를 받고 파트타임으로의 이전을 자원할 수 있음.
'과외 교사' 권장	파트타임으로 이전한 정년前 직원과 신입 사원간에 교사-제자 관계를 권장.

과 임금을 단축·삭감하는 협약을 맺었다. 또한, 파트타임제 도입 외에도 일률적 작업 시간 단축, 근로 시간의 재조정(휴가 기간 연장, 교대 근무제)을 통한 고용 창출 등의 방법들이 시도되고 있다.

워크셰어링의 가장 유명한 케이스는 유럽 최대의 자동차회사인 폭스바겐이다. 93년 독일의 자동차 생산이 전년 대비 25% 감소했고 94년 주문량이 아직 불명확한 상태에서도 생산성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폭스바겐은 95년말까지 3만 명의 인원을 감축해야 하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폭스바겐의 최대 주주인 下작소니(Lower Saxony)州의 사회민주당 정부가 대량 감원에 절대 반대하였기 때문에, 폭스바겐으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는 실정이었다. 이런 딜레마적 상황 하에서 경영자측에 의해 제안된 것이 94년 1월 1일부터 2 년간에 걸쳐 잠정적으로 실시되는 주 4 일(28.8 시간) 근무제이다. 이때, 개별 근로자는 주 4일을 근무하지만 공장 생산 시설은 주 5일 가동된다. 경영자 측의 주장에 의하면, 근로 시간 감축에 따른 20%의 임금 삭감 충격은 첫째, 소득세 부담의 감소로부터, 둘째, 크리스마스 보너스와 휴가 보너스를 1 년 내내 나누어 지급함으로써, 일정하게 완화된다. 이러한 경영자 측의 안은 독일 최대 산별 노조인 IG Metall와 지난해 11월 25일에 정식 합의되었다. IG Metall이 임금 인하에 동의한 것은 전례에 없었던 일이었지만, 이에 대해 노조는 '위기 상황 타개를 위한 한시적 대응'이라 설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워크셰어링에 대한 독일 경영자의

일반적인 의견은 어떠한가? 한마디로 말해서, 부정적이다. 왜냐하면 근로 시간을 줄인다고 해서 노동자 1 인의 복지 비용이 미국의 2 배에 가까운 독일의 상대적 약점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오히려 독일이 자랑하는 수준 높은 숙련 노동을 침식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개의 경영자들은 필요한 감원은 단행해야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회사에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는 복지비용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믿고 있다. 경영자들의 이러한 태도는 현재 진행중인 임금 협상에서도 보여지는데, IG Metall이 '임금 인상 5.5~6%, 또는 그 이하일 경우 고용 보장'을 요구하는데 대해 금속 기계 산업의 경영자 연합인 Gesamtmetall은 임금 동결과 휴가 보너스 폐지를 완강히 주장하고 있다. 지난 2월 22일 IG Metall은 파업 여부를 투표에 부치기로 결정했으나, 파업 결행과는 상관없이 폭스바겐의 예는 급속히 전파될 것 같지 않다.

전 망

위에서 보았듯이 워크셰어링은 회사측으로부터 환영받는 아이디어가 아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논쟁의 강도나 범위만큼 과연 급격히 확산될지는 미지수이다. 하지만 일단 각국 정부가 긍정적으로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공기업을 중심으로 점차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민간 기업의 경우, 개개 기업의 특수한 조건이 워크셰어링의 실시 여부를 결정할 소지가 많다. 따라서 지금까지 서구 노사 관

계에서의 산별 노조와 해당 경영자 연합간 협상 패턴이 산별 노조와 개별 기업간의 협상으로 변화해 나갈 가능성이 크다.

실업 문제는 단지 EU 국가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OECD 전체의 문제지만,¹⁾ 유럽의 경우 노동 시장이 유연하지 않아 고용 창출에서 불리하고 고세율과 사회 복지 비용으로 인한 투자 의욕이 저하된다는 점 때문에 실업을 상승은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진다. 특히, 산업 부문간 이동이 원활치 않기 때문에 불황 또는 사양 산업에서 발생하는 실업은 장기 또는 영구화되는 경향이 있다. 이들은 사회 보장제의 일방적 수혜자로 정착하게 되며, 따라서 국민과 기업은 더 큰 세금 부담을 요구받는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정부가 대규모의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몇몇 기업이 워크셰어링과 같은 방법으로 가능한 한 대량 해고 사태를 피하기 위해 시도하고 있는 그 이상의 대안은 나오지 않고 있다. 이런 방법들은 물론 근원적 해결책이 아니다.

유럽의 실업에 대해 어떤 경제 평론가들은 복지 국가의 종말이라는 일면 성급한 진단을 내린다. 그러나 복지 국가가 그렇게 간단히 막을 내릴 것인가? 2차 대전 이후 사회당 또는 사회민주당이 여당이거나 아니면 적어도 수권야당을 담당해 온 서유럽 각국은 이미 '복지'라는 것이 사회 체제이자 생활의 기본틀로 확립된지 오래다. 일단 출생하면, 아니 출생 이전부터, 국가는 개인의 복지와 안녕에

책임을 진다는 것이 유럽인적 사고의 출발점인 것이다. 80년대 초반 이후 이 기반이 위협받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위협당한다는 것과 막상 붕괴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다. 그러나 복지 국가의 장래가 어디로 방향지워지던 간에, 엄청난 수의 新계급, 즉 일자리를 구할 전망이 없거나 한번도 일한 경험이 없는 빈민군이, 부유한 나라 안에서 구조화되고 있음에는 異論이 없다. ♣

참고 문헌

1. International Labour office, *World of Work*, No. 5, 1993.
2. *European Industrial Relation Review*, No. 226 Nov. 1992, No. 239 Dec 1993, No. 240 Jan. 1994.
3. *The Economist*, 각호.
4. *Financial Times*.

1) 미국은 수치상으로 최근 고용 창출에 성공했다고고는 하나, 실상에 있어서는 거의가 숙련도와 임금이 낮은 직업군에서 있음.